

# 2월 국회 건너뛰고 3월 국회 가나

### 갈등현안 속출 국회 정상화 출구 못찾아 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 주초 회동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의 개최 전망이 여전히 시계제로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17일로 종료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여야는 일단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주 초 회동,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에 이르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의 경우 국회의원 전면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나머지 요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으로 정국은 광풍 일어붙은 상태다.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악재가 잇따르는 양상이다.

여기에 '빅 이벤트'인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진 상태다.

따라서 2월 남은 기간 여야 간 냉각기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 과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최대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노력하되, 안되면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도 있다. 국회 공전장기화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 국회 가동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관련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다.

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을 중점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한국당 역시 주요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서둘러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다만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특검과 정문희,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지만원 주장 허위 지적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여 주며 지만원씨의 5·18 관련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임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 '당내 통합' 오 '중도 확장' 김 '선명 우파'

### 한국당 당대표 후보들 토론회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은 17일 '당대표 후보자 인터넷 토론회'에서 문재인정권을 견제하고 202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순) 후보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와 보도채널을 통해 90분간 생중계된 토론회에서 경제·안보 분야 구상과 차기 총선을 위한 외연 확장 방안 등을 놓고 토론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황 후보는 '당내 통합', 오 후보는 '중도 외연 확장', 김 후보는 '선명한 우파정당'에 방점을 찍었다.

황 후보는 "국민과 당원의 바람은 싸우지 말라,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우리 안에서 힘을 모아 밖에 있는 대상과 싸워 이기는 자유 우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좌파정부가 자유대한민국에 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며 "누가 당대표가 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생각해보고 맡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가장 중요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제가 당대표가 돼야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이루고, 우파의 가치도 지킬 수 있다"며 "아울러 두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국민에게 인정받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우리를 지지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따뜻한 보수가 경제를 잘 챙겨주길 바라는 분들의 마음을 데려오는 데 저의 장점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오 후보의 '중도 확장론'을 겨냥해 "지금의 비상 상황이다. 현 정권은 주사파·사회주의 이념으로 뿔뿔 뭉쳐 치달고 있는데 중도와 포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

김 후보는 "민주당에서 당대표 후보 중 누구를 제일 부담스러워할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감히 저라고 생각한다"라며 "욕먹기 싫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는 보신주의로 갈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또 오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애증이 있다'는 표현은 과한 것이 아니냐고도 공격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고마운 건 지금도 몹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박근혜를 위한 정당도 아니라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5·18 진상규명 기약없는 표류

### 한국당 위원 재추천 두고 대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자유한국당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추천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진상규명의 주체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개월째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의 조사위원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해야 진상규명조사위가 구성돼 2년간의 진상규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당 몫 추천 위원 때문이다. 야당 몫 4명 중 3명을 가져간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추천 대상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는 등 유여결 끝내 지난 1월 예야 권태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능장 추천'했다.

그러나 이 중 자격요건 미달과 역사 왜곡 우려를 낳은 권 전 사무처장과 이전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거부당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두 인사를 그대로 다시 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 YS 차남 김현철 "한국당에 개혁보수 설 땅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인 김씨는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친박(친박근혜) 논란, 5·18 망언 등으로 얼룩진 한 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개혁보

수가 설 땅이 그곳에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량한 벌판 같지만, 과감히 자신의 몸을 던져 양극단에 있는 수구와 좌파들이 판치는 현정국을 타파하고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온건한 개혁보수의 동지를 불러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수사권조정 따른 경찰비대화 권력분산 균형 맞춰야”

### 문 대통령 “공수처, 최고권력 사정기관이 본질”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사항인 자치경찰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 비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사권을 조정하면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검찰개혁 수단의 성격 보다는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권력층에 대한 사정기관이 본질이라는 점을 짚어 설립 시 성역 없이 역할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과거 권력기관이 저지른 비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그러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은 수사권 조정 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맞닿아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본질은 검찰 개혁 방안이 아닌 대통령 등 최고위층 권력자들에게 대한 특별사정기관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검찰·경찰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변의 비리에 대해 제 기능을 못 했다”면서 “특별

사정기구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이회창 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권력자들을 포함하다 보니 판·검사도 대상이 됐는데 이것이 검사의 잘못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부각됐다. 선수가 그렇다”고 말해 공수처가 가지는 검찰 개혁 방안의 성격은 부차적인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는 방안까지 논의돼 다행스럽게 생각된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 경매 교육

- ① 경매 기초반 (무료)
  - ▶ 매주 월요일
  - ▶ 경매기초부터 ~ 입찰까지
- ② 경매 기본 실전반
- ③ 경매 실전교육 (특수)
  - 실전교육 들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

062-382-5500  
010-6670-9800

### 신축 원룸 매매

#### 광산구 산정농협 뒷 1분 (코너)

- 1층 (상가) . 2층(원룸5개) 3층(원룸5개)
- 4층 - 최고급 주택 ( A.P.T 35평형)
- 즉시 입주가능 → 월수익 500만 (주인 거주시 400만)
- 매가 8억 6천만 (용2억5천, 보 1억)

010-7384-7800      010-6670-9800

### 법률경매

상가건물 / 근린주택

- 동구 충장로 (2층 상가건물) (금남로 47역 1분) 토 35평, 건 51평
  - ▶ 감평가 3억7천7백 → 최저가 2억6천4백
- 남구 백운동 (상가주택) / 토 95평 건 192평, 대단위 아파트 위치
  - ▶ 감평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
- 서구 양동 (상가주택) / 토 138평 건 469평
  - ▶ 감평가 14억6천 → 최저가 10억
- 북구 상각동 (상가주택) (국제1층 코너위치) / 토 116평 건 332평
  - ▶ 감평가 9억8천 → 최저가 6억3천
- 서구 풍암동 (상가주택) (대단지아파트내 위치) / 토 110평 건 233평
  - ▶ 감평가 10억5천 → 최저가 10억5천

근린상가

-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2층 (전용 23평)
  - ▶ 감평가 6억7천 → 최저가 3억7천
- 북구 문흥동 (7층중 6층) (전용 226평)
  - ▶ 감평가 14억8천 → 최저가 6억6천
- 상무지구 7층 중 6층 (전용 60평)
  - ▶ 감평가 4억 → 최저가 2억2천8백
- 상무지구 아파트상가 1층 (전용 35평)
  - ▶ 감평가 16억3천 → 최저가 7억3천
- 행남동 주차타워 1층 상가 (전용 15평)
  - ▶ 감평가 4억9천 → 최저가 3억4천

062-382-5500